[논 문]

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

여 경 수*

《차 례》

I. 머리말	IV.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II.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연혁과 운영상황	1.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1.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연혁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주된 논거
2.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부과 제도	V. 개정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
III. 취업제한 규정의 법적성격과 헌법심사 기준	1. 재벌의 위험성 판단의 정도에 관한 문제점
1. 취업제한 규정의 법적 성격	2. 재벌의 위험성 판단 시기의 문제점
2.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헌법심사 기준	3. 취업제한기간에 대한 중간심사
	4.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자의 포함 여부
	5.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VI. 맺음말

*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I. 머리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래로 부터는 청소년성보호법으로 표기한다)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업에 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 환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과의 밀접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성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월하다는 의미이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은 인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2장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연혁과 운영상황(II)을 살펴본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연혁과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부와 제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취업제한 규정의 법적성격과 헌법심사 기준(III)을 다룬다.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헌법심사 기준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례의 원칙과 보안처분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다루고자한다.

제4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IV)에서는 다음과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다루었다. 헌법재판소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확정된 자’에 대한 ①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¹⁾, ② 아동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한 규정²⁾, ③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한 규정³⁾, ④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에 취업을 제한한 규정⁴⁾, ⑤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교습소에 취업을 제한한 규

1)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2) 헌재 2016. 7. 28. 2013헌바389

3) 헌재 2016. 7. 28. 2013헌마436

4) 헌재 2016. 7. 28. 2015헌마359

정⁵⁾, ⑥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한 장애인복지법 규정⁶⁾에 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때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⁷⁾ 세 번째로는, 헌법재판소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경력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⁸⁾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주된 논거의 취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제5장에서는 개정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V)을 다룬다. 2018년 1월에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안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기준으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한다.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정도에 관한 문제점, 재범의 위험성 판단 시기의 문제점, 취업제한기간에 대한 중간심사,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자의 대상 문제,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다루고자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성범죄자 경력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합헌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II.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연혁과 운영상황

1.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연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는 2005년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7801호)개정으로 도입되었다. 2010년 4월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도 취업제한 제도

5) 헌재 2016. 7. 28. 2015헌마914
6) 헌재 2016. 7. 28. 2015헌마915
7)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8)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를 적용되는 방향으로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0260호)이 개정되었다. 유럽연합 국가와 미국, 영국에서는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도 성범죄자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직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⁹⁾

2018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이 있었다(법률 제15352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한다. 또한 취업제한 그 기간을 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법원이 선고한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와는 별도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와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였다(법률 제15452호). 이처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부과 제도

가. 취업제한 대상과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이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정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9) Jacobs, James B. ; Blitsa, Dimitra, US, EU and UK Employment Vetting as Strategy for Preventing Convicted Sex Offenders from Gaining Access to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 Criminal Justice* Vol. 20 Issue 3, 2012, p294.

나. 취업제한 대상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1호에서 21호로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1호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호~제21호).¹⁰⁾

다. 위반시 제재 조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¹¹⁾ 이처럼,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¹²⁾ 또한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 규정도 있다.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¹³⁾

10)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Ⅲ. 취업제한 규정의 법적성격과 헌법심사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규율은 일반법인 형법 이외에도, 성범죄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특별법에서는 성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며, 위치추적 전자감시,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와 고지제도와 같은 보안처분을 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⁴⁾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를 강화하는 데에만 그 초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헌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한다.

1. 취업제한 규정의 법적 성격

형벌과 보안처분은 다 같이 형사제재에 해당한다. 형벌은 책임의 한계 안에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재이다. 반면, 보안처분은 장래 재범 위험성을 전제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재이다.¹⁵⁾ 취업제한의 성격을 형벌이든지, 보안처분이든지 상관없이 취업제한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가. 취업제한을 보안처분으로 보는 의견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관리, 교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형벌 사상은 특별예방사상에 근거한다.¹⁶⁾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고지제도, 위치추적 전자감시, 성충동 약물치료가 형사처벌이 종료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⁷⁾ 취업제한은 형벌과 별개의 제재수단이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

14) 여경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경향 제54호, 2017, 398쪽.

15)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16) 이훈재,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현황과 범죄억지책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2015, 4쪽.

17)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안처분의 성격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¹⁸⁾

나. 취업제한을 형벌로 보는 의견

취업제한을 자격정지형의 형벌로 파악하는 의견¹⁹⁾도 있다.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는 보안처분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범죄로부터 사회의 방위와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방위론적 처분으로서의 형벌의 성격²⁰⁾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2018년 청소년성보호법 전에는 취업제한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부과되므로, 취업제한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자격정지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¹⁾ 취업제한을 형벌로 파악하면 취업제한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다. 소결

2018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법원이 판단하여서 부과한다.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처럼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하는 취업제한 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헌법심사 기준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취업제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명확성의 원칙²²⁾, 평등권 원칙²³⁾, 형벌불소급의 원칙²⁴⁾과 같은 쟁점에서는 합헌 결정

18) 이정훈, 원혜옥, 황태정, 정혜옥,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의 발전방향, 여성가족부, 2012, 132쪽.

19) 김정환, 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의 법적성격과 발전방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 17권 제3호, 2015, 45쪽.

20) 최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54호, 2014, 231쪽.

21) 김정환, 앞의 글, 45쪽.

22)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으로부터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이 없는 것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을 내렸다. 아래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만을 중심으로 다루고자한다.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직업의 선택의 자유 중 직업제한은 현행법에서 행정제재나 그 밖의 제한조치로 사용되고 있다.²⁵⁾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수행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업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그러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²⁶⁾

나.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고 할 수 없다. :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23)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최근 성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중점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24) 취업제한제도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25) 김대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0집, 2017, 324쪽.

26) 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준수하여야 한다.²⁷⁾ 비례의 원칙이란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의미한다. 비례의 원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침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衡量 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²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²⁹⁾

다.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벌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안처분을 중복해서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상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처분으로 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서로 병과 하여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7) 헌재 2015. 7. 30. 2014헌가13

28) 헌재 2000. 6. 1. 99헌마553.

29) 헌재 1997. 3. 27. 94헌마196

하지만, 보안처분도 본질적으로는 형사벌이다. 현재의 형사제체계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이중, 삼중으로 평가되는 것은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³⁰⁾ 특정한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감시,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와 고지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 부과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보다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 성범죄자에 대한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에 대한 헌법심사에서도 더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라. 보안처분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 고려

형벌은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이다. 반면,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의 범죄발생 위험을 방지하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예방적 처분이다. 이와 같이 보안처분이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된다. 그러므로 보안처분의 부과 요건으로는 그 시점에 반드시 '재범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야만 한다.³¹⁾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된다. 다만 장래에 다시 범죄를 범할 개연성에 대한 판단은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³²⁾ 국가는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형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³³⁾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 절차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마.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헌법 심사기준

형법의 대중영합주의에 근거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30) 고명수,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 성범죄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제21권 제2호, 2013, 39쪽.

31) 정지훈,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위헌성 - '동의'에 의한 약물치료는 합헌인가,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6, 147쪽.

32) 헌재 2001.3.21. 99헌바7

33) 정지훈,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6, 21쪽.

입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헌법상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인 책임원칙, 최후수단성원칙, 비례원칙, 형벌목적,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도,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성범죄의 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도 있다.³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무조건 중복적으로 부과되기보다는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성범죄자에게는 다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³⁵⁾ 미국 연방대법원은 성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필요성과 합헌성을 갖추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³⁶⁾

성범죄에 대한 단순한 형벌강화보다는 책임원칙, 비례원칙, 재사회화, 인권보장과 같은 헌법정신에 충실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IV.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1.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처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용한다.³⁷⁾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①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

34) 윤영철, 한국형법의 최근 형벌강화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제21권 제3호, 2014, 705쪽.

35) Melissa Hamilton, Constitutional Law and the Role of Scientific Evidence,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58, 2017, p35.

36) Katie Miller, Constitutional Law - Sex Offenses And Free Speech : Constitutionality Of Ban On Sex Offenders'Use Of Social Media : Impact On States With Similar Restrictions, *NORTH DAKOTA LAW REVIEW* VOL. 93, 2017, p136

37) 이정훈,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3, 88쪽.

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³⁸⁾,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³⁹⁾, ③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장애인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⁴⁰⁾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⁴⁰⁾은 인정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환자, 장애인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의 방법도 그 적절성을 인정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주된 논거

가.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없는 경우의 침해의 최소성 위반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기본권 제한이 덜한 다른 수단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한다. 입법자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으로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⁴¹⁾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도 개별 성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가

38)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39)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40) 헌재 2016. 7. 28. 2015헌마915

41) 헌재 2015. 7. 30. 2014헌가13

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감안하여 법정형, 선고형 등에 따라 차등적인 처분을 부과하는 다른 형사정책들과의 균형에도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⁴²⁾ 또한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⁴³⁾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 모순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제도와 취업제한 제도의 관계를 세심히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정신성적 장애(psychosexual disorder)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종료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에도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는 모순”⁴⁴⁾된다고 밝혔다.

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같은 경미한 성범죄의 특성

헌법재판소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파악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전력만으로 10년의 기간 동안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⁴⁵⁾이라고 결정했다.

42)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43)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44)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45)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V. 개정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

지난 2018년 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있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주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선고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번 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1.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정도에 관한 문제점

보안처분에서 행위자의 위험성은 소송에서 확정되어야 할 보안처분의 실질적 요건이다.⁴⁶⁾ 보안처분은 위험성을 제재부과의 준거로 설명한다. 범죄자의 위험성의 정도는 책임의 범주를 넘을 수 없고, 이는 곧 보안처분이 형벌을 초과하여 실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⁴⁷⁾

2018년 1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취업제한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의 문제점은 재범의 위험성 정도이다. 현행법에서는 재범의 위험

46) 송문호, 보안처분과 형벌포플리즘,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2014, 140쪽.

47) 이승호,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2, 85쪽.

성이 있는 경우에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원칙과 예외가 변경되었다. 법률상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재범의 위험성 판단 시기의 문제점

2018년 1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서도, 재범의 위험성 판단시점을 형의 선고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취업 제한의 실제 집행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된 후에 이루어진다. 만약 장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취업 제한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선고 시점에는 취업 제한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 시점에는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정 사안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 시점이 집행시가 아닌 선고시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한 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⁴⁸⁾ 성충동 약물치료가 취업제한 명령에 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더욱 크고, 제한되는 기본권 영역이 다르다. 그러므로 취업제한 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자 모두 법적 성격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률상 취업제한 명령의 판단 시점을 형의 선고시가 아닌 형이 종료된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가 교도소나 보호감호소 내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진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취업제한기간에 대한 중간심사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재판 이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48)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에는 취업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⁴⁹⁾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부칙 제4조). 그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법원은 취업제한대상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제한 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4.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자의 포함 여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처럼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필요하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성범죄의 유형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를 범한 자를 취업제한 명령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밝혔다. 또한 형사정책적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된 사람들에게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49) 김정환, 형사재대로서 취업제한의 법적성격과 발전방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2015, 59쪽.

5.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해임을 요구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자, 사실상 노무의 제공자, 취업하려는 자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 대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직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직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⁵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지만,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VI. 맺음말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중요성은 우리사회에서는 절실하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또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취업제한 제도의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한다.

50) 김대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2017, 229쪽.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에 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취업제한 제도에 관한 법령을 위헌 선고한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모습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도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지난 2018년 1월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제도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서 차등하여 선고한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위헌의 소지나 개선과제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는, ①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정도의 문제점, ② 취업제한 명령 부과 시점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판단 시기의 문제점, ③ 취업제한기간에 대한 중간심사 방법의 문제, ④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자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도 정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자의 경중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형벌의 선고시점과 재범위험성의 상관성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취업제한의 개별적 상황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활용하여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취업제한 제도의 구체적 일탈이 이루어진 경우 취업한 자와 그 기관 등의 동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취업제한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검증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일탈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에서도 책임원칙, 최후수단성원칙, 비례성원칙, 형벌목적의 목적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 범죄인을 재

사회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범죄인과 사회의 관계회복을 모색하는 현대적인 형법 사상을 고려해야한다.

투고일 : 2018. 4. 15.

심사일 : 2018. 5. 23.

계재확정일 : 2018. 5. 23.

참고문헌

- 고명수,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 성범죄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제21권 제2호, 2013.
- 김대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2017.
- 김대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직업제한제도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0집, 2017.
- 김정환, 형사제재로서 취업제한의 법적성격과 발전방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2015.
- 송문호, 보안처분과 형벌포폴리즘,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2014.
- 여경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경향 제54호, 2017.
- 윤영철, 한국형법의 최근 형벌강화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제21권 제3호, 2014.
- 이승호,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2.
- 이정훈,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3.
- 이정훈, 원혜옥, 황태정, 정혜옥,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의 발전방향, 여성가족부, 2012
- 이혼재,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현황과 범죄억지책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2015.
- 정지훈,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위헌성 - '동의'에 의한 약물치료는 합헌인가,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6.

정지훈,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6.

최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54호, 2014.

Jacobs, James B. ; Blitsa, Dimitra, US, EU and UK Employment Vetting as Strategy for Preventing Convicted Sex Offenders from Gaining Access to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 Criminal Justice* Vol. 20 Issue 3, 2012, p265-296.

Katie Miller, Constitutional Law - Sex Offenses And Free Speech : Constitutionality Of Ban On Sex Offenders'Use Of Social Media : Impact On States With Similar Restrictions, *NORTH DAKOTA LAW REVIEW* VOL. 93, 2017, p129-141.

Melissa Hamilton, Constitutional Law and the Role of Scientific Evidence,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58, 2017, p33-42.

헌재 1997. 3. 27. 94헌마196

헌재 2000. 6. 1. 99헌마553

헌재 2001. 3. 21. 99헌바7

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헌재 2015. 7. 30. 2014헌가13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헌재 2016. 7. 28. 2013헌마436

헌재 2016. 7. 28. 2013헌바389

헌재 2016. 7. 28. 2015헌마359

헌재 2016. 7. 28. 2015헌마914

헌재 2016. 7. 28. 2015헌마915

<국문초록>

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

여 경 수

이 논문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로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취업제한 제도는 일정한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규정한 것에 관한 위헌성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도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월, 국회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한다. 또한 그 취업제한 기간을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평석과 더불어서, 개정된 법률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합헌적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

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주제어: 취업제한, 헌법재판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자,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Abstract>

A Review on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Imposed on Sex Offenders

Yeo, Gyeong-Su *

The article discusses the Korea initiatives in order to prevent convicted sex offenders from having access to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oint out and propos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Persons convicted of violent offences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should be prevented from working with children.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done regarding restriction on employment which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ex offenders are restrained from being employed on child and youth educational institutions, of which include medical profession and home-school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current restriction on employment derived from the lack of court's decision, and to propose possible improvements.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at system by analyzing the constitutional logics which Constitutional Court has suggested in the cases.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s to prescribe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for committing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nd the procedures

*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of Kyonggi University, Ph.D in Law.

therefor, prepare procedures for relieving and assisting victimized children and juveniles, and systematically manage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thereby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sound members of society.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as a criminal punishment by constitutional court.

Key Word: Restriction of Employment, Constitutional Court,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ex Offenses, The freedom of Occupational Options, Proportionality Test